

# 오피니언

## 다산포럼

임현진



하기보다 그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 이제 정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하며, 더 이상 시장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오만한 과신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시장을 해결사로 보고 정부를 문제아로 여긴 신자유주의 세계화 논리에서 벗어나, 더 이상 정부를 악마처럼 여기고 규제를 조롱하며 행정을 비아냥거려서는 안 된다

이처럼 '자본주의 4.0'은 정부와 시장을

계가 아니라 동반자관계를 설정한다.

예컨대, 석유에너지 고갈(peak oil)을 두려운 마음으로 전망하면서 시장은 오염비용을 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자본주의 4.0'의 한계는 지구적 차원의 대응전략 및 협력방식을 제대로 내놓지 못한 데 있다.

비록 '자본주의 4.0'이 계속 진화하여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전망을 제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올 지구적 차원의 복합 위기를 너무나도 일면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1년 월가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 여러 도시들로 파급되었던, 부유한 1%에 대한 가난한 99%의 '점령하라!'(Occupy!) 시위는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었다.

그는 철학과 가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 오늘의 시장 근본주의에 대한 개혁을 강조한다.

## 신자유주의, 대안은 없는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야기된 원칙과 가치의 붕괴이기 때문이다.

물질을 지향적 가치 아래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시작된 조그만 이기심이 상대방에 대한 거짓말과 속임수를 통해, 무모한 투자 관행으로 이어져 중국에는 공동체를 해체하고 사회갈등을 낳고 말았다

분리하는 대신에 더욱 가까운 관계로 설정한다. 그 이유는 오늘의 세계화는 정치·경제적 상황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고, 애매모호한 세계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4.0'은 시장과 정부 모두 안전하지 못하며 잘못을 저지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제도적 적응력을 키우며, 이데올로기적 유연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제안한 '창조적 자본주의'도 있지만, 그것은 '시장에 의한 정치'를 '사람이 살아갈 만한 사회'로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아나톨 칼레츠키(Anatole Kaletsky)의 '자본주의 4.0'은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충분한 검토의 대상이 된다.

'자본주의 4.0'은 자본주의를 전면 부정

## NGO 칼럼



윤주욱

지리산은 그냥 '산'이 아니다. 지리산은 생명평화가 살아 숨 쉬는 곳이며,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국립공원이다.

그런데 지금, 지리산국립공원은 성장과 개발, 눈앞의 이익에 갈기갈기 찢기고 있다.

## 4개의 케이블카, 지리산 망칠 셈인가

가 올라가도록 자연공원법을 개정할 환경부는 올해 2월 지리산국립공원 4곳(남원, 함양, 산청, 구례), 설악산국립공원 1곳(양양), 월출산국립공원 1곳(영양)을 대상으로 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지 선정 일정'을 발표하였다.

환경부는 3월 23일까지 7개 지자체로부터 최종보안서류 제출을 받은 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검토, 민간전문위원들의 검토(현장 확인, 경제성 검토결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결과, 관계기관 협의결과, 시민단체 의견 등 종합검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민간전문위원회 검토결과, 현장검증, 심의의결 등)를 거쳐 올해 6월 말까지 시범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겠다고 한다.

국립공원 케이블카에 대한 논의는 2001년 시작되어 2004년 말 환경부는 '엄격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 허용하겠다'라는 원칙을 발표하였고 당시 모든 지자체는 케이블카 추진을 포기하였다.

환경부는 지금 당장, 졸속으로 추진되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추진 정책을 멈추고 차기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차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기고



김관중

이제만 약 11만명, 경제손실 약 18조 원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 태국 홍수, 그리고 이웃나라 중국의 경우 지난해 60년만의 최악의 겨울가뭄과 5월 이후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로 약 9000만 명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이에 따른 피해액이 41조 원에 이른 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날씨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빈도와 강도가 갈

##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물관리

수목 세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많은 학자들은 '새로운 일상(New Normal)'으로 받아들여 새롭게 재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남지역 역시 기후변화와 물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1996년부터 식수원으로 사용하지 않은 영산강 수질은 갈수록 4급수(농업용수 기준)를 넘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남지역의 최대 식수원인 주암댐이 희소식을 전한다. 현재 주암댐 저수량은 예년대비 약 116% 수준인 총 39억으로 향후 강우가 없더라도 약 270일 동안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넉넉한 양이다.

주암댐은 저수량도 풍부할 뿐더러 수질 역시 매우 청정할 상태이다. 댐 유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물 감시원들이 상시적으로 수질을 감시하고 있다.

깨끗하고 풍부한 상수원은 주암댐관리단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의 중요성을 알고 깨끗한 상수원 보호에 열정을 다하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 입시 왜곡정보 퍼뜨리는 작전세력 주의해야

속의 사람이 바보스럽기는 하지만 이번 2012학년도 조카의 대입시 과정을 지켜본 그 가족으로서 너무나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다.

소위 작전, 혹은 작전세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증권시장에서만 쓰이는 말이 아니라 입시철에 인터넷에서도 활개를 치고, 각종 자격시험 같은 데서도 난무한다고 하니 관계되는 분들이 속거나 휘말리지 말기를 바라며 글을 쓴다.

조카가 서울의 모 대학에 지원하려고 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에 입시관련 정보가 있는지 들어가 보았다. 그랬더니 인터넷에는 "그 대학 내부에 중요 정보가 있으니 ○○대(○○학부) 지원하라" "○

○점수라면 ○○대는 충분하다" 혹은 "○○점수로는 ○○학부는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마치 꼭짓계처럼 찍어주었다.

입시철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게 수험생과 그 가족들인데 해당 대학에 정확한 소스를 제공해주는 내부 정보원까지 있다는 말에 조카는 거기에 맞춰 지원했다.

하지만 조카는 그 대학에 보기 좋게 낙방을 했고, 나중에 알보니 특정 대학, 혹은 특정학부 쪽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해주는 이런 게시글이 실제로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는 걸 알았다.

없는 것을 믿고 지원한 우리 쪽에 책임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다. 인터넷에 보니 다른 사람들도 주변에서 ○○대학과 ○○대학 중 어떤 지원할지 고민하던 중 "○○대학은 미달될 가능성이 크고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다"는 식의 분석까지 나온 걸 보고 지원했다가 탈락한 사람도 있다는 댓글이 올라와 있었다.

합격·불합격 여부를 떠나 한 사람의 인생

##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있어 가능한 일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사회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지역형 상수원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이제 물관리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변화하는 시점에 와 있다. 홍수와 가뭄을 다스리는 '치수'(治水), 생활용수와 공급용수를 공급하는 '이수'(利水)를 넘어 문화와 레저 수요를 충족하고 행복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친수'(親水)도 물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물관리의 변화에 따라 주암댐은 깨끗하고 맑은 물공급은 물론 주민들의 윤택하고 풍요로운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물로 더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힘쓸 것이다.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시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작전세력은 잠적인 존재이다. 앞으로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속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장영환·광주시 동구 총장보

## 시설

### 여수박람회 벌써 바가지 상흔 극성이라니

여수세계박람회 개막을 두 달 앞두고 여수지역 숙박료가 크게 치솟는 등 바가지 상흔이 극성이라고 한다.

업계에 따르면 엑스포 홈페이지에 하루 숙박료 9만 원으로 돼있는 한 호텔은 박람회 기간 요금을 2인실 기준 26만 8000원으로 올렸다.

숙박비 상승은 시설 부족이 원인이다. 그러나 원인을 전적으로 거기에 돌릴 수는 없다.

문제는 바가지 상흔이 숙박요금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당장 숙박업소들의 횡포를 그대로 두면 박람회 개최가 다가올수록 음식점 등 다른 서비스 요금의 바가지도 기승을 부릴 게 뻔하기 때문이다.

여수박람회는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런 호기를 바가지 상흔 때문에 망칠 수는 없다.

여수박람회는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런 호기를 바가지 상흔 때문에 망칠 수는 없다.

## 광주시 총인시설 비리 그 끝은 어디인가

광주시가 지난해 발주한 총인저감시설 비리 그 끝을 구속 행렬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광주지검이 4급(서기관) 공무원 2명과 대학교수 및 업체 간부 2명 등 4명을 추가 구속하면서 지금까지 사회지도층 인사 12명이 쇄고랑을 찬 것이다.

12명 가운데 고위 공무원 4명은 업체 간부로부터 총인시설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1500만 원~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이며, 심사위원인 교수 3명은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각각 2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이런 사건은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교수·고위 공무원과 업체 간에 '검은 거래'가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충격은 그만큼 크다.

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말해 비리 관련자들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마디로 총체적 비리 북마진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과 업체 간의 담합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교수까지 개세하면서 수억 원대의 뇌물에도 조직적이고 노골적이라는 말문이 막힌다.

광주시는 그동안 공직비리가 터질 때마다 '청렴'을 입버릇처럼 떠들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다.

## 無等鼓

제주에는 지금도 이어도와 관련한 설화가 구전되고 있다. 옛날 제주에 아내를 둔 한 남자가 이어도로 가서 집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다.

제주에는 지금도 이어도와 관련한 설화가 구전되고 있다. 옛날 제주에 아내를 둔 한 남자가 이어도로 가서 집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다.

## 이어도



또 다른 이야기. 제주 조천리에 고동지란 남자가 중국으로 진장을 가다 표류해 한 섬에 실려 갔다. 고동지는 과부들만 사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149km, 중국 동부 장쑤(江蘇)성 양바다 가장 동쪽의 퉁다오(童島)로부터 247km 떨어져 있고 한국과 중국의 EEZ(배타적경제수역)가 중첩되는 곳이다.

요즘 이어도가 시끄럽다. 중국이 새삼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기 때문이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전체의 일부 매장량은 최대 1000억 배럴, 천연가스는 72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도는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라운 한 여인은 '여똥할망'(이어도의 한 여인)으로 불리며 제주에서 살다가 죽었는데 사람들은 해마다 제사를 지내 주었다고 한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培樂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내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재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 A X 227-96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